

산업보건 주요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일 국민과 함께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역학조사 결과 발표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혈액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 높아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007년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생에 따라 2008년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관찰자료의 부족 등 당시 역학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충분한 관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년간(2009년~2019년)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역학조사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6개사 전·현직 근로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분석했으며, 2008년 역학조사와 달리 이번 추적 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대비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의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도 비교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일반국민 및 전체 근로자에 비해 혈액암(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및 사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의 경우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19배, 전체 근로자 대비 1.55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배, 전체 근로자 대비 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배, 전체 근로자 대비 1.92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2.52배, 전체 근로자 대비 3.68배로 나타났다. 혈액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한 원인을 확인하지

는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작업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24세 여성 오퍼레이터에서 혈액암의 발생 위험비가 높았다. 클린룸 작업자인 오퍼레이터, 엔지니어 등에서 혈액암 발생 또는 사망 위험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현재 보다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높았던 2010년 이전 여성 입사자에서 혈액암 발생 위험비가 높았다.

한편 혈액암 외에 위암, 유방암, 신장암 및 일부 희귀암도 발생 위험비가 높았는데, 이는 반도체 근로자들이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암 검진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위암 등이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고, 희귀암의 경우 사례가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역학조사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연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한편, 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여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체를 포함하여 반도체 등 전자산업에 대해 직무별 화학물질 노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위험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역학조사 보고서 전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oshiri.kosha.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부터 앞장서야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시공 현장
51곳에 대한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3건, 4명 사망)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2019년 4월 15일~5월 3일)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를 보면 고용부는 건설 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 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를 부과(6,558만 원)했다. 아울러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 어떤 기업이 잘할까?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등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 첫 번째 발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다.

한편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24.4%가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입 사유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이나 생산성 등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747,749개)를 모집단으로 5천 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인사담당자)하였고,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1.375%p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사정 3자가 참여하여, 노동과 고용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UN 산하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해서는 2018년 7월부터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두 차례의 공익위원안도 마련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5월 20일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측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유통상과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 비준